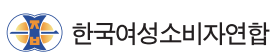




21대 대통령과 정부에게 바라는 소비자 정책 제안



제21대 대통령에게 소비자가 제안합니다.

모든 국민은 소비자입니다. 소비자의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고, 헌법 제124조는 정부가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.

1 대통령직속 소비자민생위원회 설치가 필요합니다.

관세전쟁으로 예상되는 생활물가 불안, 의료시스템의 붕괴, 전세사기, 딥보이스 피싱, 홍콩ELS, 제주항공기 사건부터 땅꺼짐 사고, BMW 화재, 아파트 붕괴, 가슴기살균제, 머지포인트, 티메프, SKT 정보 유출 사건 등 전 부처에 걸친 다양한 소비자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소비자민생위원회 설치가 필요합니다.

2 소비자 집단소송 도입과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가 필요합니다.

소비자의 생명, 신체, 재산의 대규모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구제를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제,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필요합니다. 소비자 피해 예방과 신속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치하여야 합니다.



우리 삶에서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21대 대통령이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대합니다.

3

AI가 바꿀 세상, 소비자 불안을 해소할 대책이 필요합니다.

AI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, AI 소비자권리보장 법제 마련, AI 피해대응 및 분쟁기구 설치, AI 리터러시 교육 강화, 알고리즘 설명책임 부과, AI를 이용한 범죄 대응 기술개발 지원, 취약계층 대상 범죄 처벌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합니다.

4

심각한 기후위기,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.

기후재난 대응 역량 강화, 기후재난 매뉴얼 구축 및 소비자 안전 체계 확립, 식량자급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, 친환경 제품 생산 및 소비환경 조성, 플라스틱 종식 국제협약 체결 참여 등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.

1

대통령 직속 소비자민생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.



문제점

- ① 소비자 피해는 특정 부처의 문제가 아닌 범정부적 문제
- ② 기존 국무총리 산하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 부재
- ③ 헌법 제124조(소비자 보호)의 입법 정신 몰각
- ④ 소비자 관련 위급상황에서 의미 있는 역할 수행 미흡

제안

- ① 대통령 직속 상설 소비자민생위원회 설립
- ② 독립 예산·조직을 갖춘 사무국 운영
- ③ 소비자권의 증진기금 확보 및 체계적 대응 시스템 구축
- ④ 소비자정책 수립 및 평가 지표 수립
- ⑤ 헌법 제124조에 기반한 소비자보호운동 보장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

2

소비자의 일상이 위험하다.



문제점

- ④ 고물가 시대의 물가불안
- ④ 의료대란
- ④ 전세사기 피해
- ④ 먹거리 불안(미세플라스틱, 후쿠시마)

제안

- ④ 물가안정관리를 위한 소비자단체 활동 지원 강화
- ④ 공공요금 원가 책정과정 투명화
- ④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, 응급의료 체계 강화
(건강보험 보장성 확대, 네트워크 기반 일차의료 통합의료체계 구축, 지역의료 강화 등)
- ④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연장 및 실효성 확보
- ④ 미세플라스틱 종합대책 마련

3

대규모 안전사고로 소비자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.



문제점

- ① 이태원 참사, 땅꺼짐 등 대규모 사고
- ② 제품·서비스 안전 문제
(전기차 화재, 급발진, 항공기 안전, 아파트 부실, C-커머스 등)

제안

- ① 실시간 소비환경 안전 관리 시스템 도입
(공공시설, 공공서비스의 관리부실 대응 방안 마련)
- ② 소비자안전 관련 법제화 및 실효성 있는 법 집행 강화
- ③ 항공, 건설, 모빌리티 관련 안전 대책 마련
- ④ 해외 플랫폼의 국내법 적용 및 국제 공조 체계 구축
- ⑤ 안전한 제품 유통을 위한 플랫폼 책임 강화

4

온라인플랫폼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.



문제점

- ① 티메프·머지포인트 등 플랫폼 거래 피해
- ② 이중가격제, 후기조작, 자사우대 등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성

제안

- ①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
- ① 소비자피해 보상기금, 공제조합 등의 소비자 보상기구 마련
- ① 카드사·PG사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행, 가맹점 관리 강화
- ① 플랫폼사업자의 경영안정성에 대한 공시 의무화
- ① 신유형 상품권 등에 사업자 지불불능에 대한 법 제도 정비
- ① 플랫폼 소비자 문제 대응을 위한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 지원

5

각종 소비자 사기 피해가 심각하다.



문제점

- ④ 시를 이용한 딥보이스 피싱, 각종 피싱, 중고거래 사기, 주식 리딩방 등
- ④ 고령자 대상 사기 피해 증가
- ④ AI위싱, 그린위싱 등
- ④ 불법 도박사이트, 선불식할부거래 결합상품 사기

제안

- ④ 경찰청 내 소비자 사기 전담부서 설치
- ④ 사기범죄 수사·처벌 강화, 1372공조체계 구축
- ④ 첨단범죄 대응 기술개발 지원
- ④ 고령자, 아동,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범죄 처벌 강화
- ④ 법률 구조 및 예방 교육 체계 확립

6

AI시대, 소비자가 불안하다.



문제점

- ④ AI 구독비용 차별, 알고리즘 불투명성, AI 리터러시
- ④ 개인정보 문제
- ④ AI 윤리(비인간적인 대응), AI워싱 등
- ④ 악의적 조작

제안

- ④ AI 소비자 권리 보장 법제 마련
(포용성, 공정성, 차별받지 않을 권리, 안전성과 신뢰성, 개인정보 통제권, 책임성, 피해구제, 행동할 권리)
- ④ AI 피해 대응 및 분쟁조정 기구 설립
- ④ 제조물책임법 개정(소프트웨어 포함) 알고리즘 설명책임, 입증책임 전환
- ④ AI 리터러시 교육 강화 및 국제 협력 확대
- ④ AI 관련 정규 교육과정 편입(윤리와 활용)

기후위기,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환이 절실하다.



문제점

- ④ 폭염·한파·집중호우·산불 등 기후 재앙
- ④ 식량 및 에너지 위기
- ④ 플라스틱 관련 제도의 후퇴

제안

- ④ 식량자급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추진
- ④ 기후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소비자안전 체계 확립(법, 제도, 조직)
- ④ 주택, 도로침수, 땅꺼짐 등에 대한 공공 및 개인 시설 주변 안전성 확보
- ④ 기후재난 대응 매뉴얼 구축(지역중심의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)
- ④ 친환경 제품 생산 및 소비환경 조성
- ④ 기후취약계층 보호정책 강화(에너지 바우처 확대, 기후 불평등 해소)
- ④ NO플라스틱 제도화(일회용품 사용금지) 및 국제 플라스틱협약 참여

8

집단소송제, 입증책임전환,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.



문제점

- ① 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어려움
(가습기 살균제, 라돈침대, 자동차급발진, 자동차 화재, 티메프, 금융펀드 사기, 주가조작, 불완전 판매, SKT 정보 유출 사건)
- ② 글로벌 기업의 소비자 피해배상 차별
(폭스바겐 연비 조작, 애플 배터리 조작, BMW 화재 등)

제안

- ①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
- ②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
- ③ 디스커버리 제도 및 소비자단체소송 요건 및 절차 완화
- ④ 공익소송 패소자 비용 부담 폐지

